

‘통합·협치’ 최대 화두... 경제 회복·안보 위기 극복 ‘첩첩산중’

총리 등 조각·청와대 비서실 인선 통합의지 시험대 경제 우선 순위 정하고 사드·위안부 해결책 찾아야

새 대통령 과제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열렸지만 그의 앞에 놓인 정치 환경과 시대적 상황은 접점산중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정부의 권위는 무너진 가운데 민생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경제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가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주석,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일본의 아베 수상 등 ‘스트롱맨(strongman)의 각축장’이 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은 그야말로 ‘시계 제로’다.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북 핵 도발,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과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는 동북아 정세의 일대 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과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풀어가야 할 과제들을 조명해보자.

◇국민통합과 협치=‘통합과 협치’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좌우하는 화두다. 여소야대 현실 아래서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 과제를 실천해야하기 때문이다. 촛불 민심의 원명과 제도권 정치를 조화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선 국회와 소통하는 리더십은 필요충분조건이다.

선부르게 개혁 과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진영 프레임에 갇혀 좌초될 수 있다.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취임 직후의 조각과 청와대 비서실 인선은 문재인 정부의 통합 의지와 수권 능력을 평가하는 가능지가 될 전망이다.

당장, ‘밀실·코드·보은 인사’가 아닌 국민과 시대의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고 당파와 지역을 초월한 ‘대통합인사’는 국민 화합을 이루는 길이다.

협치도 절대 과제다. 민주당이 집권했지만 과반에는 한참 못 미쳐 협치 없는 개혁 입법은 한발 짝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열쇠는 문재인 대통령이 쥐고 있다. 여소야대에서 대통령이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협치는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주요 인사들을 수시로 만나 국정운영 방향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경제 회복=문재인 대통령은 녹록치 않은 경제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보수정부 10년 동안 고착화된 저성장과 청년실업, 일자리 문제, 민생 경기 침체는 가장 중요한 숙제다. 내부적으로 수출과 동조화되지 않는 내수 침체가 단기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가계와 기업은 미래 불확실성에 투자와 소비를 줄이고 있고 단기적 부동산 부양정책으로 가계 부채는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더십 있는 경제 컨트론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는 심리인 만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대선 과정에서 나온 각종 경제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 우선 순위를 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청년 일자리 해법 마련, 일자리 양극화 해소 방안을 빠른 시간 안에 정책으로 현실화해야 한다. 또 각 당의 입장 차가 큰 경제정책 방향과 일자리 대책 등 현안을 조율하기 위한 ‘여·야·정 경제 협의체’(가칭) 구성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외교·안보 위기 극복=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정상 외교 공백으로 ‘잃어버린 5개월’을 따라잡아야 한다. 작년 12월 9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5개월 동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 한반도 주변 질서는 급박하게 돌아갔다.

우선 ‘트럼프 리스크’ 관리가 1순위 과제로 꼽히고 있다.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에서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사드 비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북 문제 등 난제들을 원만하게 풀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 정상 간의 소통 채널을 강화해야 한다. 사드 보복으로 수교 이후 최악의 상황인 중국과의 관계도 과거



대통령 선거일인 9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부인 김정숙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흥은2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 호시절로 복원해야 한다. 한일 관계는 위안부 문제 등 국민 정서와 대일 외교 사안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

특히, 한반도의 상황은 구한말에 비교될 정도로 엄중하다. 북한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핵·미사일 능력을 바탕으로 연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고, 미국은 대북

선제타격도 배제하지 않은 채 수시로 전략 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해 군사적 긴장감이 치솟고 있다.

결국 국민적 공감대와 협치를 바탕으로 보다 정교한 프로그램과 국제 공조를 통해 대북 문제에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동욱기자 tuim@

오늘부터 임기 시작... 10시 취임식

인수위 없는 정부 출범

국회서 선서... 규모 대폭 축소

첫 공식 업무는 현충원 참배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대선 직후처럼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10일 바로 취임, 집무를 시작하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사태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새 대통령은 당선 확정과 함께 곧바로 국정의 키를 잡아야 한다. 인수위 설치를 명시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주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행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도록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인수위 없는 정부 출범’은 대

한민국 정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며 새 대통령은 복잡한 절차를 밟아면서 곧바로 국정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오전 6~7시 개표가 모두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 개표가 완료되면 선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19대 대통령을 확정한다. 중앙선관위원장이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후보자의 이름을 부르고 의사봉을 두드리는 순간,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문 대통령의 취임식 규모도 대폭 축소된다. 10일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약식 취임식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등 정부와 정당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또 문 대통령은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안보 상황을 보고받는 것으로 첫 공식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고위급 공무원 7000명 임면권

방탄차·전용기·전용열차 제공

권한과 예우

군통수권·법집행권 등 부여

내란·외환외 외 불소추 특권

헌법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된다. 따라서 그 권한은 막강하고 예우도 특별하다.

◇권한=우선 문 대통령은 행정과 관련, ▲국군의 최고사령관으로서 국군통수권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각 분야별 행정을 처리하기 위한 법령 집행권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내리는 긴급명령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내리는 계엄 선포권 등을 갖는다.

◇예우=문 대통령은 의전·경호상 국가원수로서 예우를 받는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부터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를 받으며 특수 방호차량 등 전용차량도 제공된다.

또 미사일 추적 기만장치와 적외선 방해장치 등 각종 특수장치가 장착된 전용 헬기(S-92)를 탈 수 있으며 ‘공군 1호기’ 임면권도 행사할 수 있다. 이 권한의 대상에는 고위공무원 1500여명을 포함해 모두 7000여명의 공무원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문 대통령은 외교와 관련,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조약을 체결하

는 권한과 외국과의 외교사절을 받고 우리나라의 외교사절을 파견하는 권한이 있다. 이와 함께 입법과 관련,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거부권 ▲명령 제정권 등을 갖는다.

아울러 사법에 관한 권한으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의 장(長)과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법관 임명권과 ▲사면·감형·복권 등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예우=문 대통령은 의전·경호상 국가원수로서 예우를 받는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부터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를 받으며 특수 방호차량 등 전용차량도 제공된다.

또 미사일 추적 기만장치와 적외선 방해장치 등 각종 특수장치가 장착된 전용 헬기(S-92)를 탈 수 있으며 ‘공군 1호기’ 임면권도 행사할 수 있다. 이 권한의 대상에는 고위공무원 1500여명을 포함해 모두 7000여명의 공무원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美·中·日·獨 외신 ‘文 유력’ 출구조사 앞다퉀 보도

9일 오후 8시 마감된 19대 대통령 선거의 공동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외신들은 이를 앞다퉀 속보로 보도했다.

AFP통신은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 발표 직후 가장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압도적 승리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AP통신과 교도통신도 문 후보의

당선이 예상된다는 출구조사 결과를 긴급 속보로 보도했다.

중국의 신화통신과 독일의 dpa통신도 발 빠르게 문 후보가 앞섰다는 출구조사 결과를 긴급 속보로 전했다.

영국의 BBC 방송도 ‘긴급뉴스’(breaking news)로 ‘진보가 한국 대선에서 승리

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송고했다.

로이터통신도 문 후보를 진보적인 인권 변호사이자 북한에 대해 중도적 정책을 옹호하는 인물이라고 설명하며 보수 성향 경쟁자인 홍 후보를 가법게 이겼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9대 대선의 방송 3사 출구조사

에서 압승했다고 9일 긴급 보도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 발표 5분 뒤 긴급기사를 통해 “문재인 후보가 방송사 출구조사에서 큰 차이로 앞섰다”고 보도했다.

당선(騰迅·텐센트)도 속보를 통해 한국 대선 출구조사에서 문재인 후보가 41.4%로 1위였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23.3%,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1.8%의 득표율로 뒤를 이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NPL관련업무를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 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 NPL(근저당권)투자는?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상가, 공장, 토지, 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 광주시 광산구 남산동 733-1, 733-6
- 토지 : 총 1,370㎡
- 용도 : 주거지 1층 건물 철거조건
- 6억5천만원

- 전남 나주시 다시면 월대리 587-27외 3필지
- 토지 : 총 5,524㎡
- 용도 : 주거지 2층
- 8억3천만원

- 전남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 579-49외 3필지
- 토지 : 총 866㎡
- 용도 : 나대지
- 2억5천만원 (교환가능)

경매, NPL채권 배우면서 투자 가능하신 분 3명 모집 (2017년 3월 6일 ~ 2017년 3월 30일 까지)

NPL 채권 매입 전문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지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